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

2006.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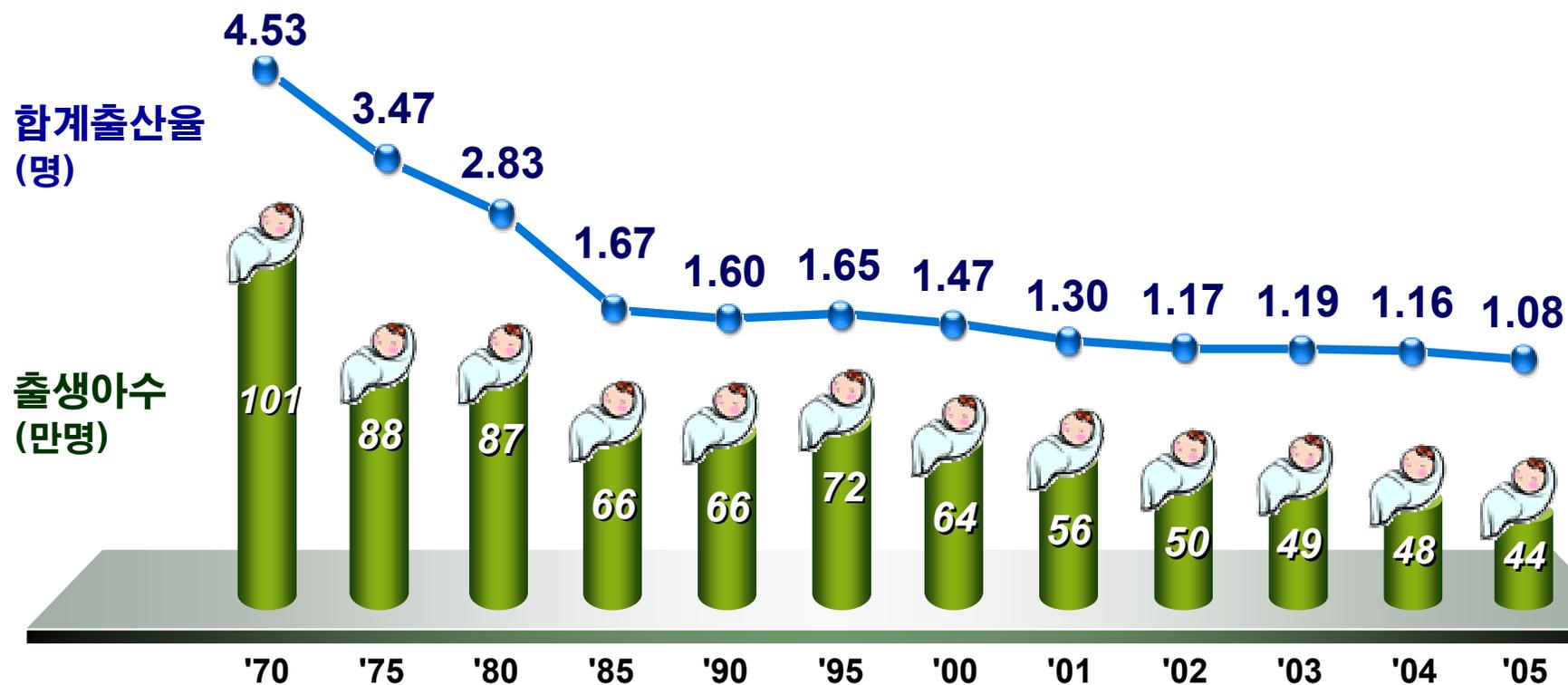
- I. 저출산 및 고령화 현황과 미래 파급 효과
- II.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 III. 21세기 고령사회 대책
- IV.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전략

1. 저출산 및 고령화 현황과 미래 파급 효과

- 저출산 및 고령화 현황과 인구전망
- 미래 파급효과

저출산 및 고령화 현황과 인구전망

저출산 현황



저출산 및 고령화 현황과 인구전망

고령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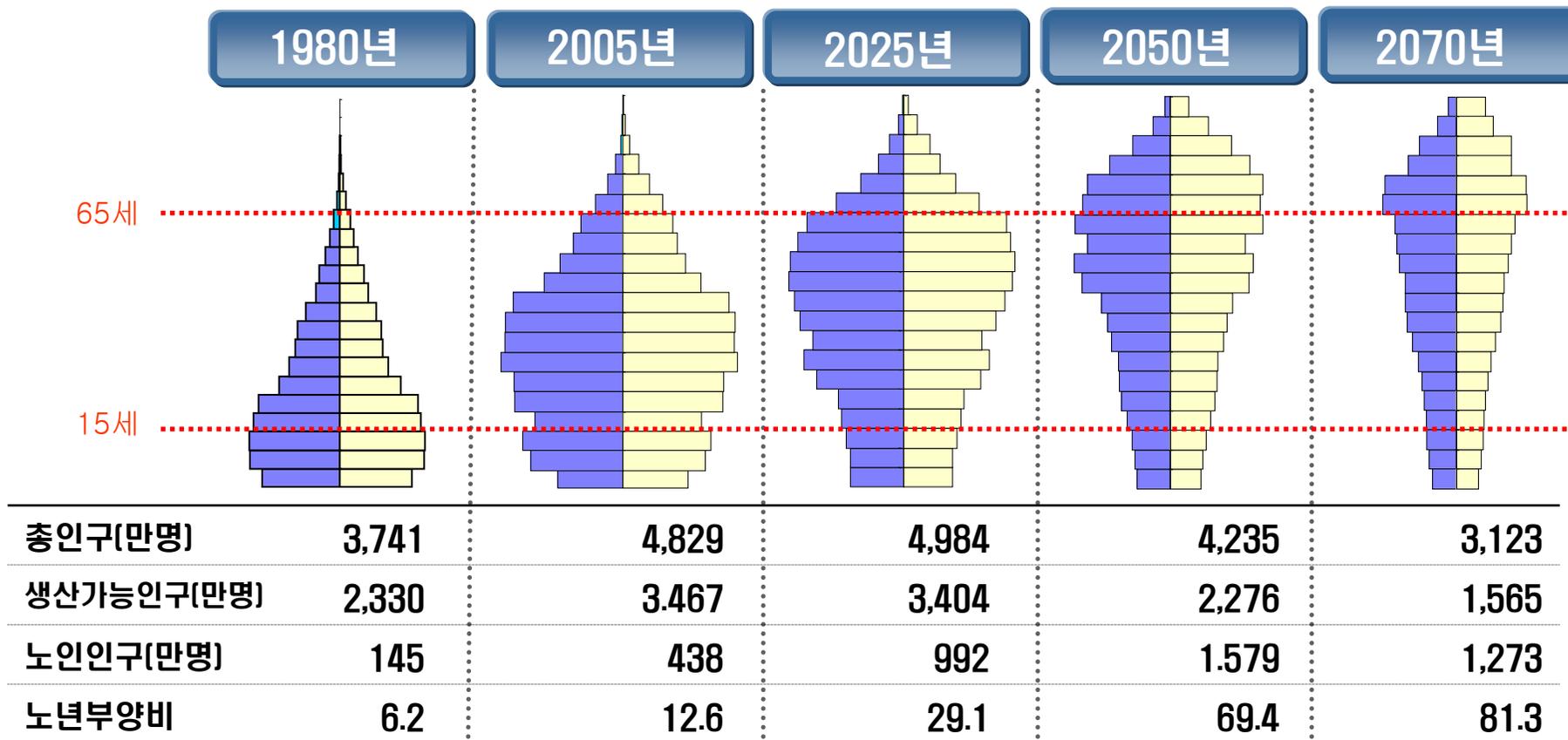
-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은 18년으로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로 이행하는데 8년 소요
 - ※ 2050년 34.7%로 OECD국가 중 최고 고령화 수준

	노인인구비율	소요기간 (년)
	7%(고령화사회) → 14%(고령사회)	
한 국	2000년 → 2018년	18
일 본	1970년 → 1994년	24
프랑스	1864년 → 1979년	115
독 일	1932년 → 1972년	40
영 국	1929년 → 1976년	47
스웨덴	1887년 → 1972년	85

자료: 일본총무청, 『高齡社會白書』(2000)

저출산 및 고령화 현황과 인구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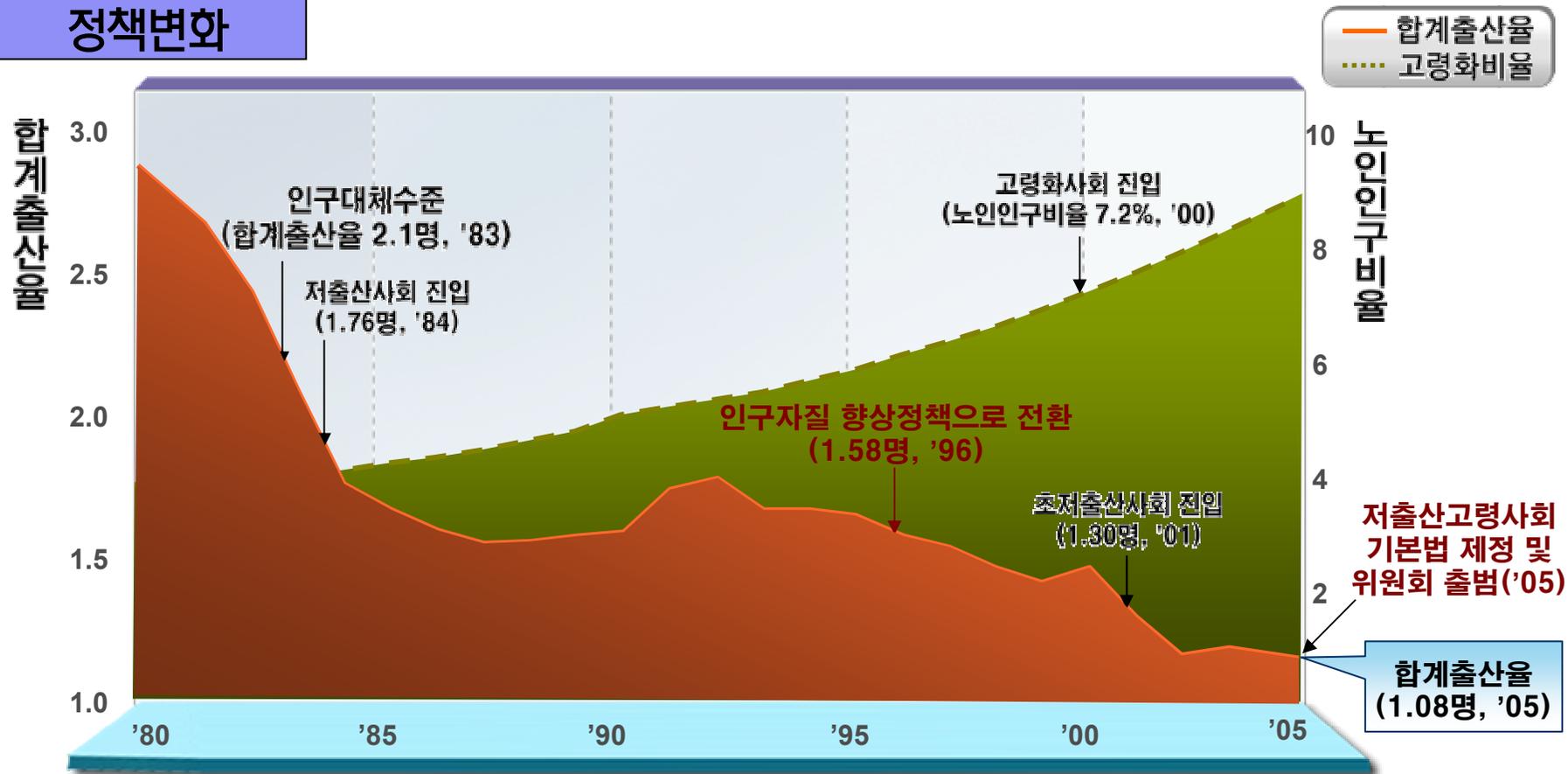
고령화 현황



- 출산율(명) 가정 : 1.19('05) → 1.24('20) → 1.30('35 이후)
- 평균수명(세) 가정 : 77.9('05) → 81.0('20) → 83.3('50)

저출산 및 고령화 현황과 인구전망

정책변화



- 80년대 저출산사회 진입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 전환 지연
- 경제위기로 출산 감소추세 가속화 : 비정규직, 청년실업, 양극화

미래 파급효과

■ 경제성장 둔화

-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감소, 소비·투자위축, 재정악화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 잠재성장률 둔화 : 5.08%(2000년대) → 1.53%(2040년대)
- 재정안정성 취약 : GDP의 약 10% 재정적자('40년대)

■ 노동력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로 노동생산성 저하
- 생산가능인구 감소 : 3,369만명('05) → 2,276만명('50)
- 생산가능인구 고령화 : 38.0세('05) → 43.5세('50)

미래 파급효과

■ 사회보장부담 가중

- 노인의료비·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 세입기반 약화, 노인관련 재정지출 급증으로 재정수지 악화
- 노인1명당 부양자수: 8명('05년) → 4명('22년) → 2명('37년)
- 2015년을 정점으로 연금가입자 감소, 연금수급자는 지속적 증가
- 공공의료비 중 노인인구의료비: 22.9%('04년) → 56.9%('50년) → 60.4%('70년)

■ 가족기능 약화 및 다양한 복지 요구 폭증

- 가족기능 약화, 가족복지의 국가·사회 공동부담 전환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 폭증

■ 세대간 갈등 첨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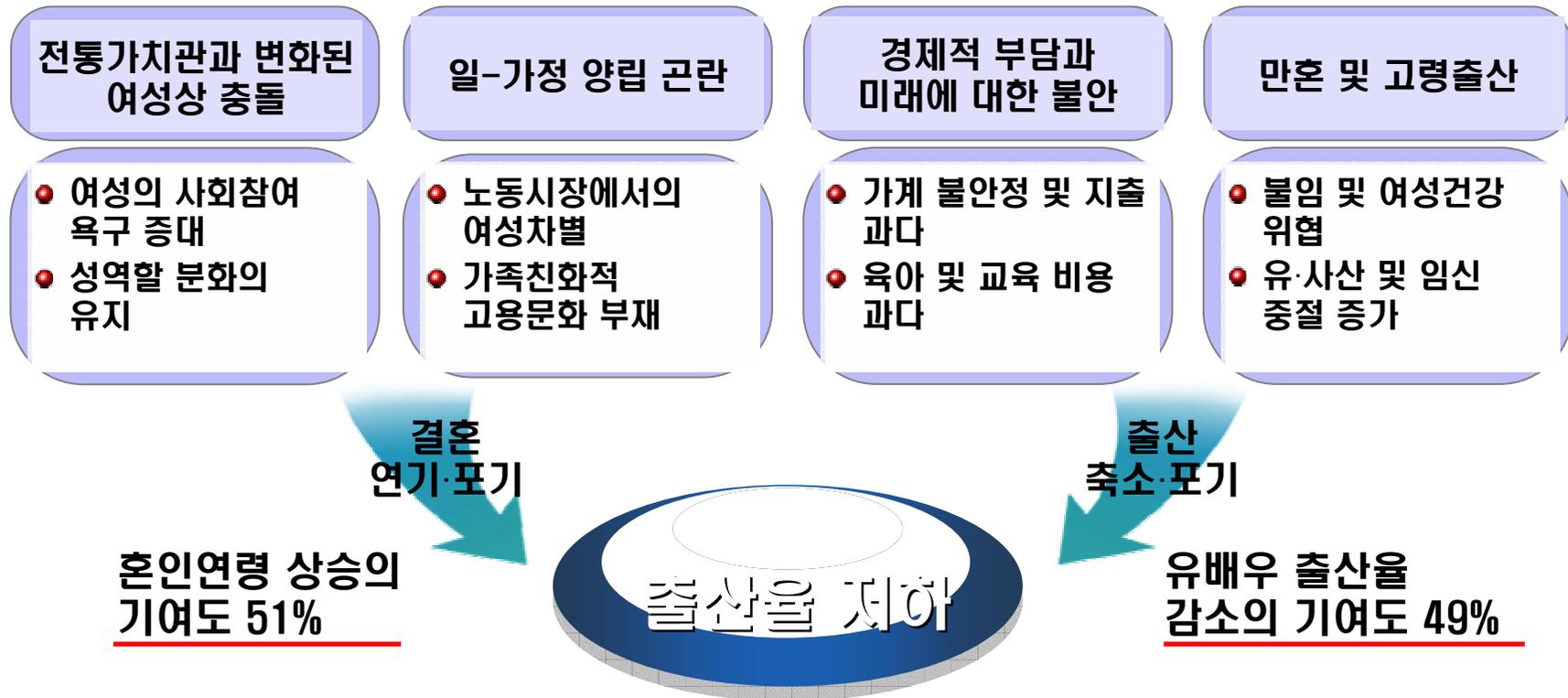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부담 증가, 부담의 적정성·형평성 논란 등 세대간 갈등 심화

II.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 현황
-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 저출산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 현황

저출산의 원인



- ※ 여성초혼연령(세) : 25.4('95) → 26.5('00) → 27.7('05)
- ※ 초산연령(세) : 26.5('95) → 27.7('00) → 28.9('04)
- ※ 기혼여성 불임율 13.5%('03), 임신소모율 31.2%('05)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 현황

대응 현황

→ 저출산문제의 시급성에 비해 정책적 대응은 초기단계

뒤늦은 공론화

- 저출산사회 진입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 관성 지속
- 출산을 저하에 대한 정책적 관심 부재
- 국민연금 재정('02), '02년 합계출산율 1.17('03 발표)로 사회 이슈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 대응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설치('04.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05.9)
-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수립('06.6 시안발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상대적 고출산국가의 정책성공 요인

북유럽 (스웨덴, 1.71)

- 가사-육아의 남녀분담
- 일-가정 양립 지원
- 자녀양육의 경제적 지원
- 육아 인프라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 이민의 사회적 수용

불어권 (프랑스, 1.89)

- 가사-육아의 남녀분담
- 일-가정 양립 지원
- 자녀양육의 경제적 지원
- 육아 인프라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 이민의 사회적 수용

영미권 (미국, 2.1)

- 노동시장 유연화
 - 일-가정양립 용이
- 저비용 민간보육이용 활성화
-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

※ GDP대비 가족수당비('01) : 스웨덴 2.9% 프랑스 2.8% 미국 0.4% 한국 0.1%

※ 여성경활율('03) : 스웨덴 72.8% 프랑스 56.7% 미국 65.7% 한국 51.1%

※ 혼외출산율 : 스웨덴 56%('04) 프랑스 43.7%('01) 미국 33.8%('04)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저출산국가의 저출산 요인

독일어권 [독일, 1.37('04년)]

- 가톨릭문화 영향으로 성분업적 역할규범 유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소극적 수용
- 일-가정 양립 곤란 및 지원 미흡 [노동시장 경직화]
 - 대졸여성 40% 출산 포기
- 자녀 육아·교육비용 지원 미흡
 - 가족수당의 소득대체율 저조
- 보육서비스 부족(0~3세아 대상)

남유럽 [스페인, 1.25('02년)]

- 가톨릭문화 영향으로 성분업적 역할규범 유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소극적 수용
- 일-가정 양립 곤란 및 지원 미흡 [노동시장 경직화]
- 청년의 자립 곤란
 - 25세 이하 실업률 30%, 높은 주택가격
- 자녀 육아·교육비용 지원 미흡
- 공적 보육시설 부족
- 빈곤층 복지위주의 가족정책 한계

※ GDP대비 가족수당비('01) : 독일 1.9% 스페인 0.5% 0.4% 한국 0.1%

※ 여성경활율('03) : 독일 58.7% 스페인 46.8% 한국 51.1%

※ 혼외출산율('01) : 독일 23.6% 스페인 17.7%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일본 1.29

추진정책

- 일-가정 양립 제고(근무방식 개선)
- 육아인프라(보육서비스 다양화)
- 경제적 지원(아동수당)
- 가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 청년층 안정화·자립 정책 추진

싱가포르 1.25 대만 1.24

- 일-가정 양립 지원(육아휴직)
- 육아인프라(시설보조금, 외국인 가정부)
- 경제적 지원(조부모 보육급여 지원)
- 가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 결혼지원(주택 지원)

한계

- 동아시아적 특수성
 - 가부장적 유교문화 영향으로 성역할 규범 지속
 -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부족(장시간근무 관행, 노동시장 경직화)
 - 다양한 가족(동거, 미혼모)의 사회적 비수용
- 일-가정 양립지원 미흡
- 적기에 종합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함(단편적 정책 추진)
- 권장·계몽 위주 비예산사업의 한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

목표

2011-20: 출산을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
2006-1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정책추진체계의
효과성 제고

추진과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일-가정 양립가능 사회시스템 구축
-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건강·의료보장체계 구축
- 노인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여성·고령 인력 활용
-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 고령친화산업 육성

저출산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출산·양육의
장애요인 제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 확충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
- 학교·사회교육 강화
- 가족 생활 문화여건 조성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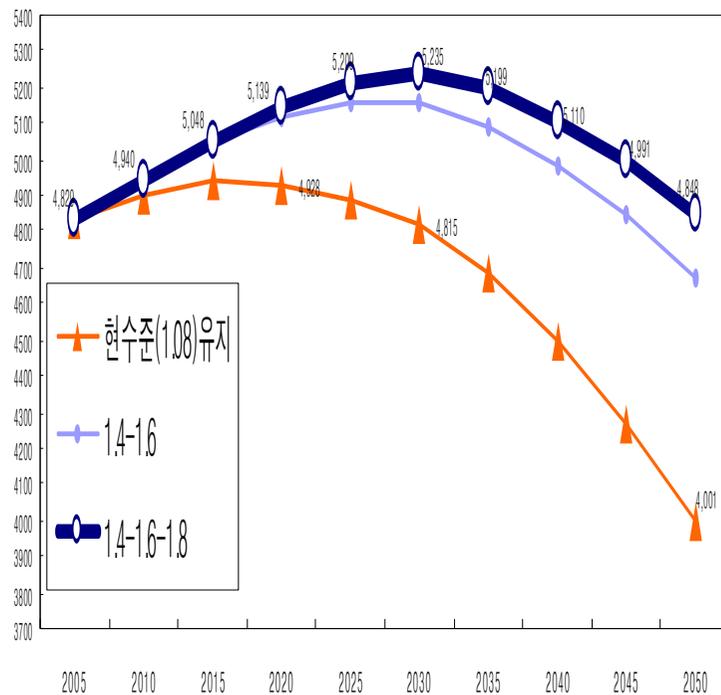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저출산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출산율 회복시 인구구조 변화와 영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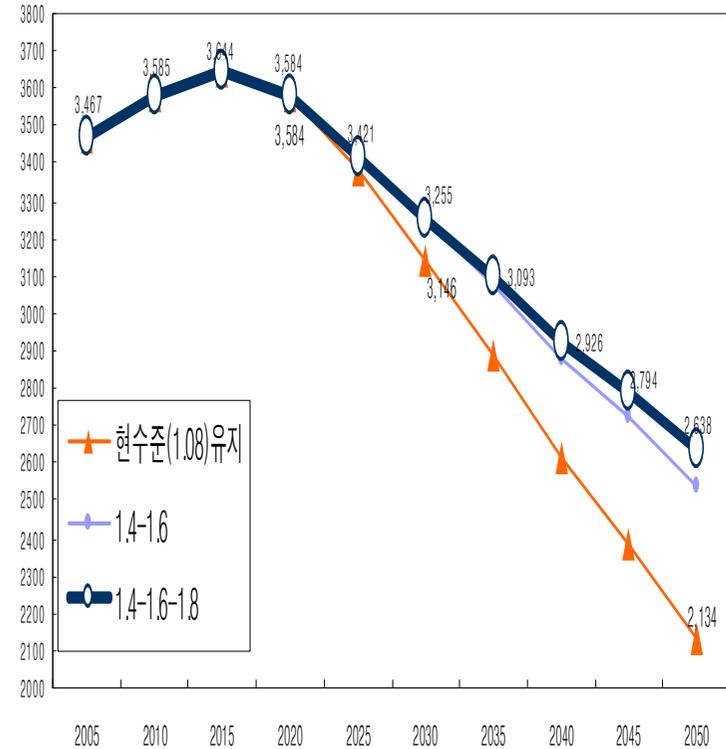
합계출산율 가정별 인구규모 변동

총인구수(만명)



합계출산율 가정별 생산가능인구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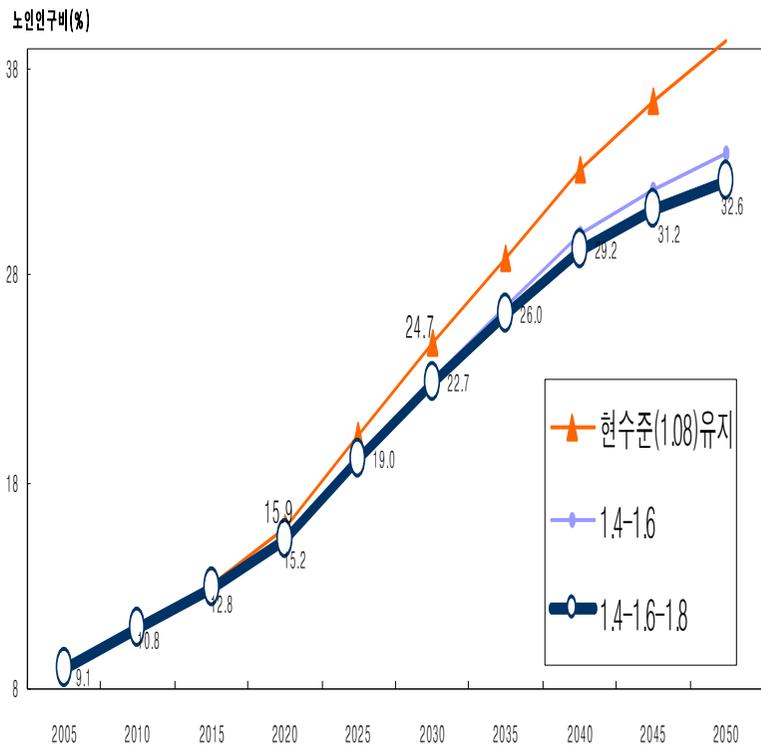
생산가능
인구수(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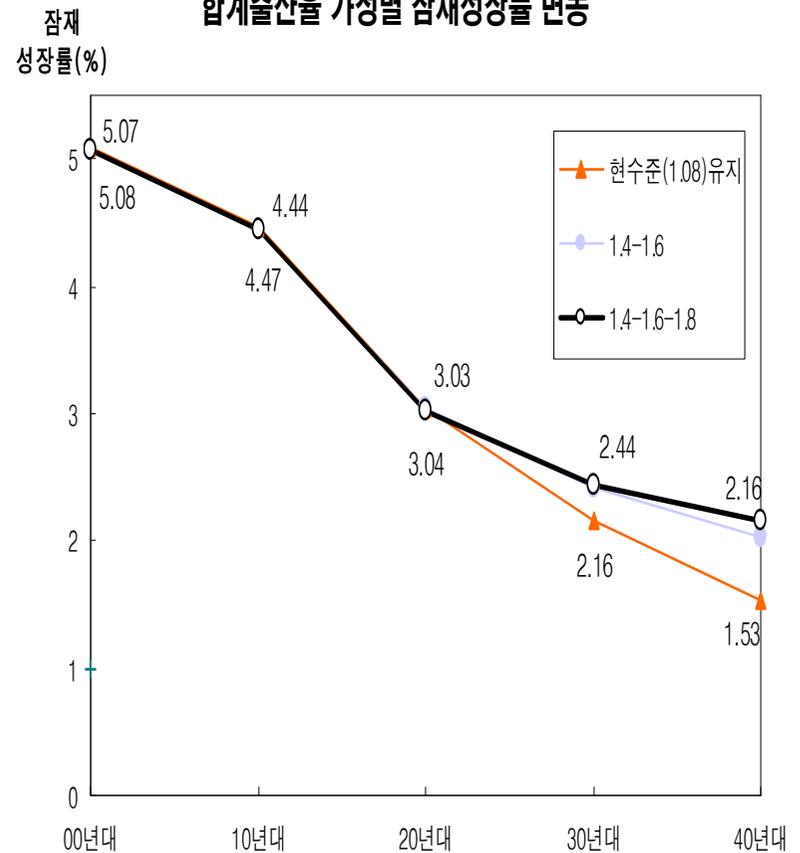
저출산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출산율 회복시 인구구조 변화와 영향 전망

합계출산율 가정별 노인인구비율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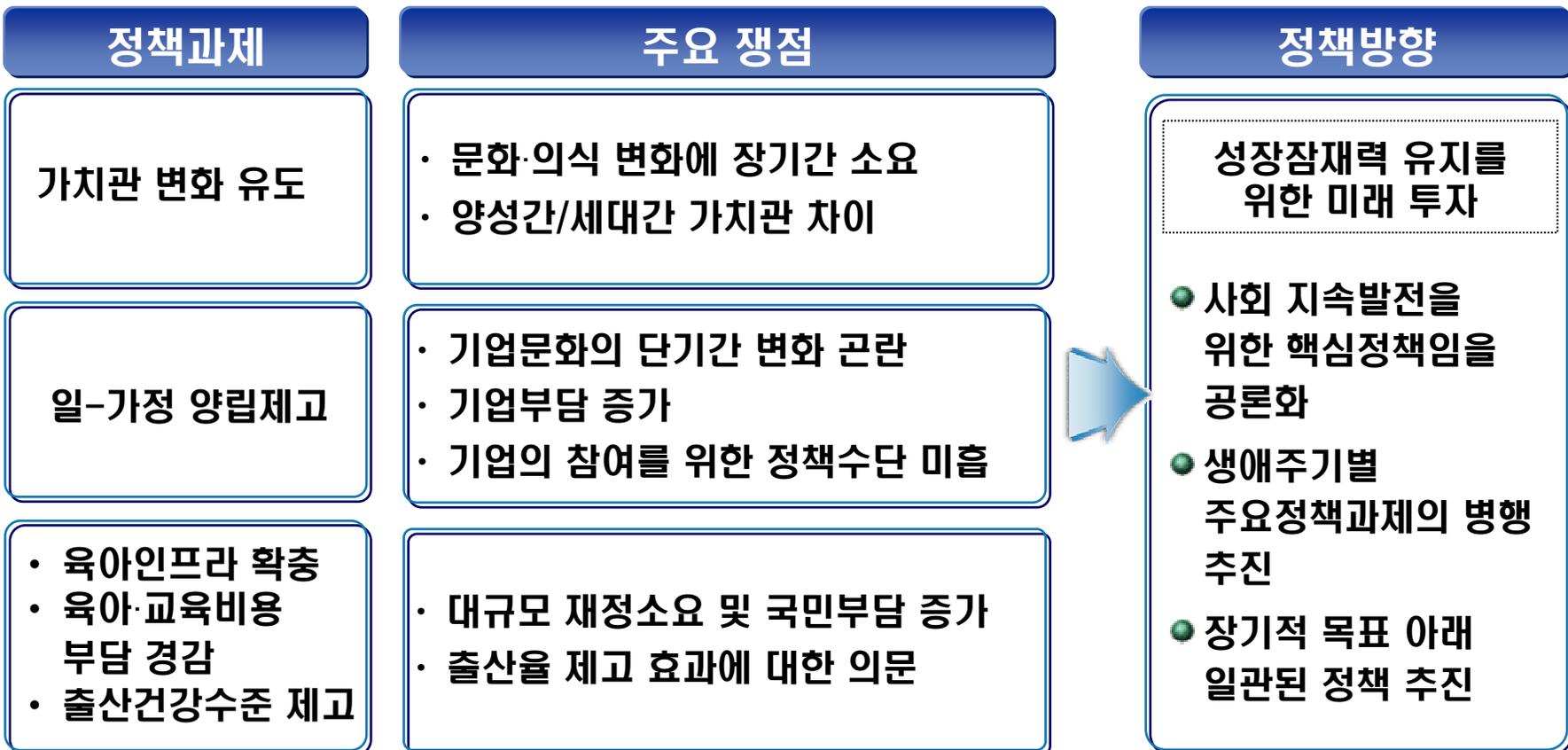


합계출산율 가정별 잠재성장률 변동



저출산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대책추진상의 쟁점과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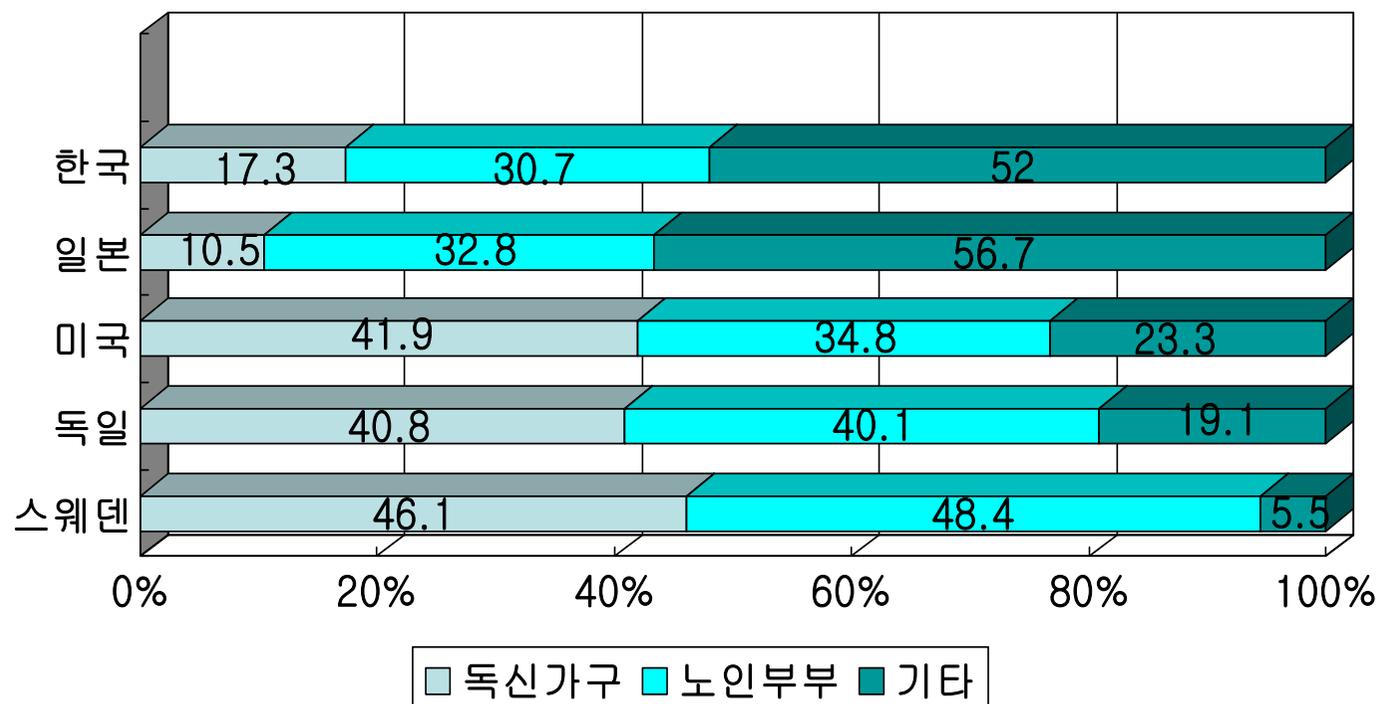
Ⅲ. 21세기 고령사회 대책

- 노인생활실태와 욕구
- 고령사회 대책

노인생활실태와 욕구

노인가족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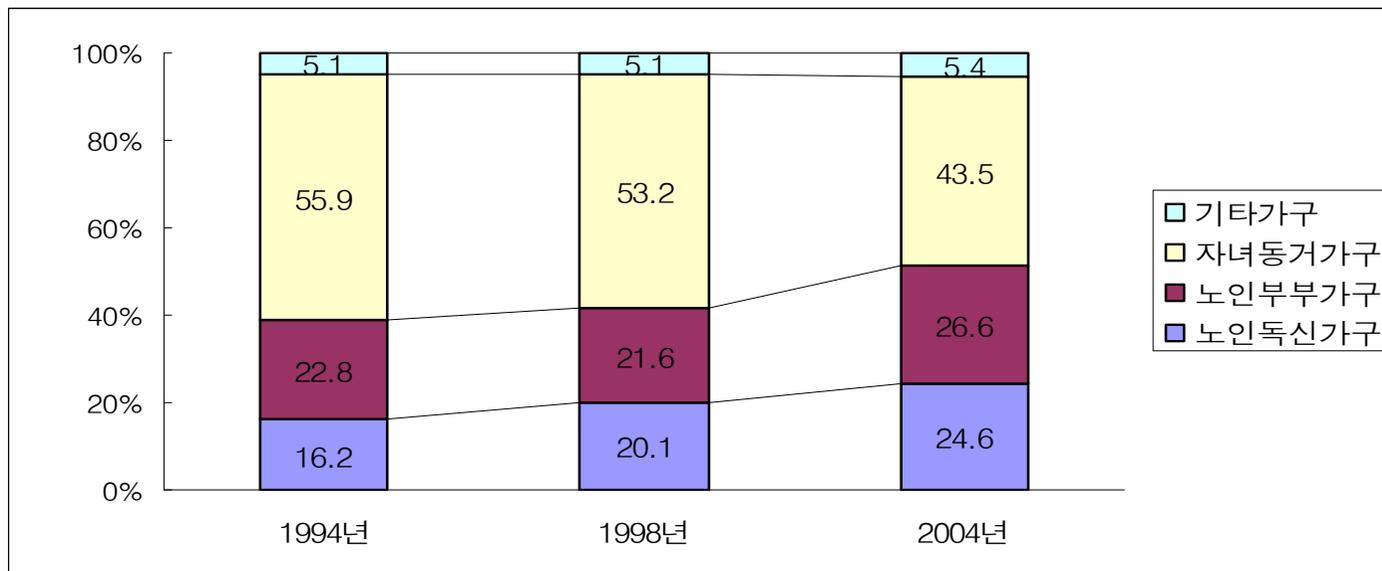
- 한국과 일본은 노인단독가구(독거+부부)의 비중이 서구국가에 비하여 낮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단위: %)



자료: 일본내각부, 『高齢者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 (2001)

노인생활실태와 욕구

- 노인의 가구형태의 변화
- 2004년도 현재 노인가구 중 24.6%가 노인독신가구, 26.6%가 노인 부부가구로 절반 이상이 노인단독가구이며, 1994년 이후 자녀동거가구는 감소추세임.
- 이는 더 이상 노년기의 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임.



노인생활실태와 욕구

노인의 취업실태

- 노인의 취업비율은 전체노인의 30.8%로 대부분의 노인취업자가 은퇴연령규정이 없는 농림·어업,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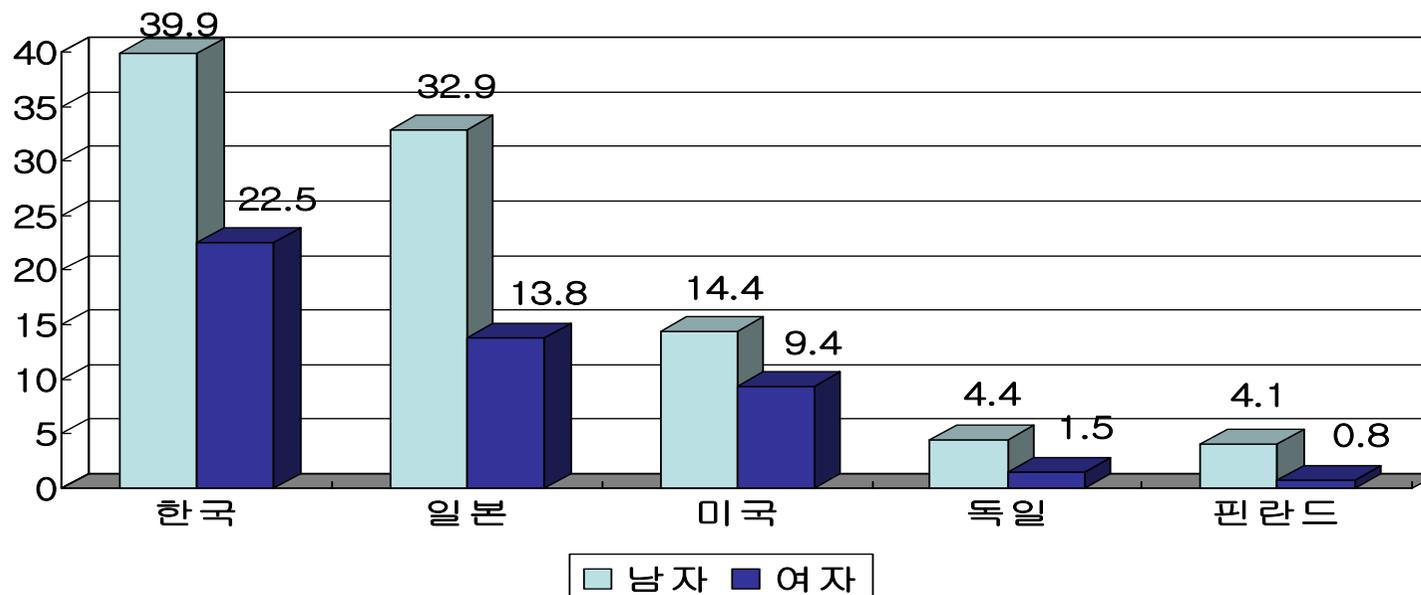
	전체	남자	여자
비취업	69.2	58.2	76.2
취업	30.8	41.8	23.8
전문사무직	4.9	8.1	0.9
판매직	5.4	4.3	6.6
서비스직	3.4	1.6	5.4
농림어업	53.9	54.9	52.8
기능직	4.6	8.2	0.7
단순노무직 등	27.8	22.7	33.6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결과로 9,308 표본가구의 노인 3,029명에 대한 조사결과

노인생활실태와 욕구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 39.9%, 여자 22.5%로 외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 이는 외국에 비하여 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임.
- 취업노인의 69.9%가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고 있음.



자료: 일본 총무청, 『高齡社会 白書』(2002)

노인생활실태와 욕구

노인의 비취업 이유

- 비취업노인의 58.2%가 건강이 좋지 않아 취업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일자리가 없어서 응답한 노인은 17.1%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일하고 싶지 않아서	7.1	8.9	6.2
일할 필요가 없어서	5.2	6.5	4.5
일자리가 없어서	17.1	32.3	9.8
건강이 좋지 않아서	58.2	46.8	63.6
자녀들이 못하게 해서	3.2	2.2	3.7
가사일·가족수발 때문에	7.5	1.8	10.3
기타	1.8	1.6	1.8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결과로 9,308 표본가구의 노인 3,029명에 대한 조사결과

노인생활실태와 욕구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 전체 노인의 90.9%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
 - 관절염 43.1%, 고혈압 40.8%, 요통·좌골통 30.6% 등

(단위: %)

	전체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전체	90.9	89.7	92.1	91.3
남	84.4	82.3	86.0	86.4
여	95.0	95.4	96.3	93.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결과로 9,308 표본가구의 노인 3,029명에 대한 조사결과

노인생활실태와 욕구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

- 장기요양이 필요한 장애인(경증, 중증, 최중증 장애인)은 전체 노인의 약 10% 수준
- 여성의 사회참여증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공적 장기요양체계구축이 요구됨.

(단위: %)

	비율 [%]	실수(천명)	
		2005년	2010년
허약 노인	5.85	256	313
치매 노인	4.92	216	263
경증장애 노인 (부분와상상태)	4.98	218	267
중증장애 노인 (반와상상태)	3.24	142	173
최중증장애 노인 (완전와상상태)	1.68	74	90
합 계	20.67	906	1,10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의 결과로 노인 5,058명
에 대한 조사결과

노인생활실태와 욕구

노인의 사회참여 실태

- 남자 노인은 사교단체활동 비율이 50.5%로 가장 높고, 여자 노인은 종교활동 비율이 57.7%로 가장 높음.
- 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에 현재 참여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함.

(단위: %)

		종교활동	사교단체	문화활동	운동단체	정치단체
전체		47.9	35.5	0.9	3.9	2.1
지역별	동부	49.1	36.1	1.1	4.2	1.5
	읍·면부	45.3	34.3	0.7	3.2	3.2
성별	남자	32.3	50.5	1.7	7.9	4.4
	여자	57.7	26.1	0.4	1.3	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결과로 9,308표본 가구의 노인 3,029명에 대한 조사결과

노인생활실태와 욕구

중·고령자의 사회적 관심사

- 65세 이상 노인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고, 45~64세는 취업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음.

(단위: %)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노후소득보장	28.9	32.8	45.7	62.6
취업지원	32.5	36.7	28.0	16.8
요양보호서비스	16.6	14.4	14.4	13.8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12.8	8.2	6.0	2.9
세대간 가치관 통합	1.7	0.9	1.0	0.3
환경조성	7.5	6.7	5.0	3.4
기타	0.0	0.2	-	0.1
계	100.0	100.0	100.0	100.0
[명]	(2,059)	(1,392)	(1,092)	(4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가구조사(응답자 9,308명) 결과로 45세 이상 응답자의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음.

노인생활실태와 욕구

중·고령자의 건강악화후 희망 거주형태

- 유배우 노인의 경우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배우자와만 살고 싶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단위: %)

희망 거주 형태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유배우상태	배우자와만 살고싶다	67.8	74.2	73.8	69.8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	9.4	9.1	14.5	19.5
	노인요양시설에서 살고 싶다	22.5	16.4	11.5	10.7
	기타	0.2	0.3	0.1	-
	계	100.0	100.0	100.0	100.0
	(명)	(989)	(708)	(659)	(24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가구조사(응답자 9,308명) 결과로 45세 이상 응답자의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음.

노인생활실태와 욕구

- 무배우 노인의 경우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자녀와 같이 살겠다는 비중이 높음.
-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는 응답도 상당수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노인요양시설 선호도가 높음.

(단위: %)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무 배 우 상 태	도움을 받으며 혼자 살겠다	30.1	32.2	36.0	30.7
	자녀와 살겠다	20.1	29.1	39.2	44.5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	49.4	38.3	24.1	24.9
	기타	0.4	0.4	0.6	-
	계	100.0	100.0	100.0	100.0
	[명]	[989]	[708]	[661]	[24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가구조사(응답자 9,308명) 결과로 45세 이상 응답자의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음.

노인생활실태와 욕구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 65세 이상 노인에 비하여 중년층의 경우 노후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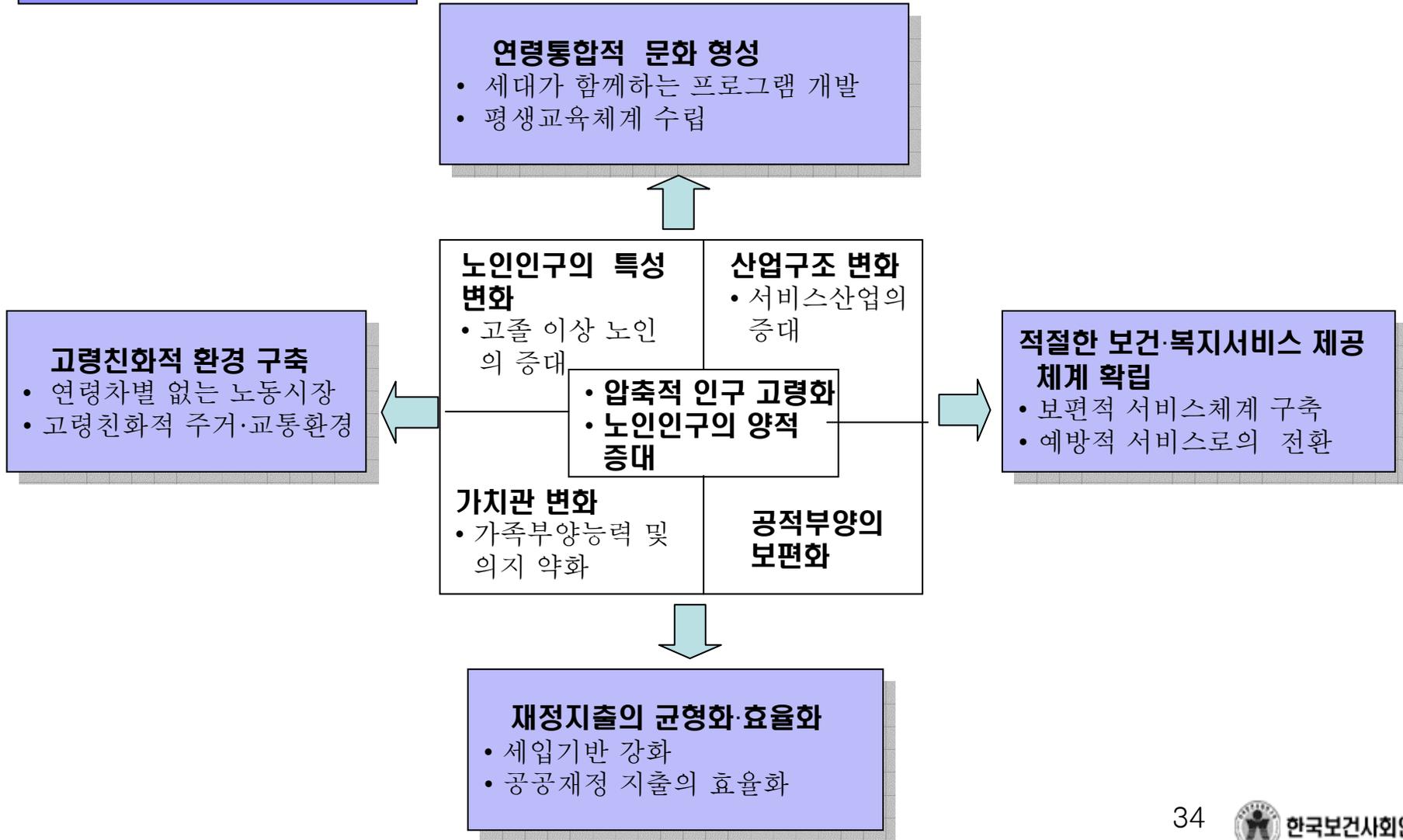
(단위: %)

	스스로 마련	가족 및 자녀	국가	기타	계	[명]
45~54세	53.6	5.9	39.9	0.7	100.0	[2,063]
55~64세	50.3	8.7	40.6	0.4	100.0	[1,393]
65~74세	46.7	12.1	40.9	0.3	100.0	[1,095]
75세 이상	33.2	22.6	44.2	-	100.0	[4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가구조사(응답자 9,308명) 결과로 45세 이상 응답자의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음.

고령사회 대책

고령사회의 도전과 대응



고령사회 대책

비전과 목표

비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사회

목표

-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기반 구축 및 강화
- 고령친화적 사회보장·재정제도로의 전환 운영
- 세대간 연대통합을 도모하는 노후 생활보장 구축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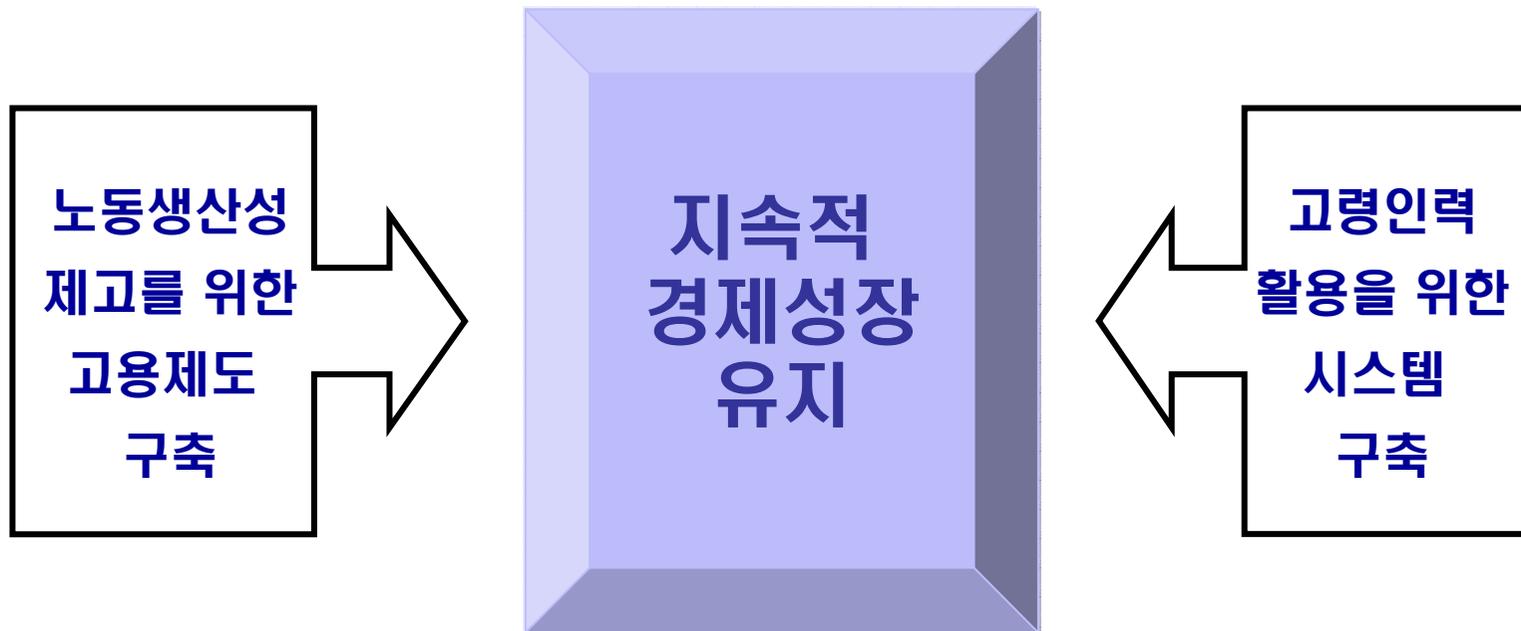
고용·경제부문

보건·복지부문

재정·금융부문

고령사회 대책

고용·경제부문



고령사회 대책

고용·경제부문

고용제도 개선

정책
목표

노동생산성 제고

정책
과제

문제점

- 중·고령근로자 증가로 노동생산성 저하
- 취업자중 45세 이상 비중: 36%('00년)→46%('10년)
- 산업인력의 고령화→신지식·신기술 적응력 부족
- 보건복지 등 서비스 산업부문의 근로자 고령화



대책

- 고부가가치 산업부문 인력개발 양성 및 고용지원
- 산업부문별 생산성 제고
 - 제조업,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노동생산성 제고
 - 보건복지부문 종사자의 업무 효율화

고령사회 대책

고용·경제부문

생애 현역 지원

정책
목표

고령자 취업률 증대

정책
과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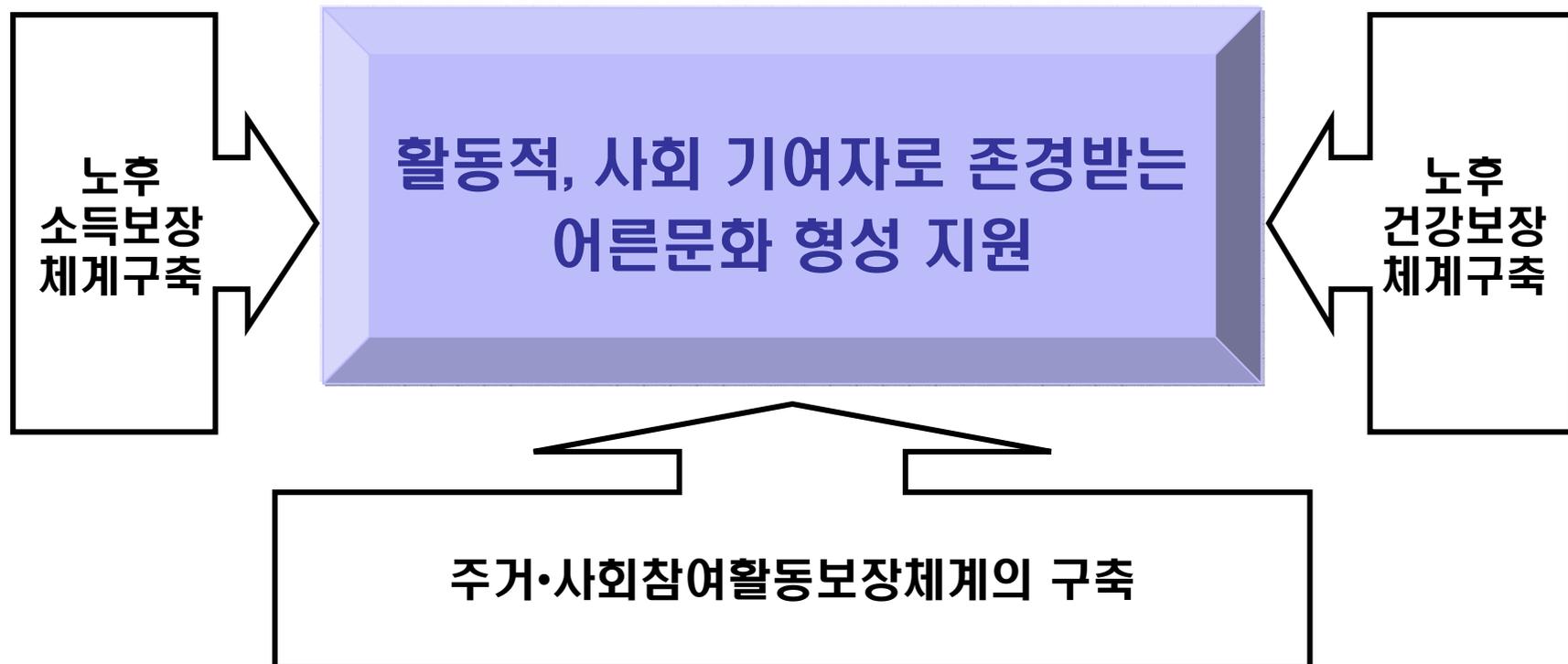
- 정년단축으로 노후생활 불안
 - 300인 이상 사업장 정년: 57.2세('00년)→50.6세('02년)
- 중고령자 고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중고령자 의무고용률(3%)이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음
 - 노인적합직종의 임의적 적용
- 중고령자 고용관련 장려금제도 미흡

대책

- 중고령자 고용·취업지원대책 마련
 - 중고령자의 고용·재고용·취업장려금 확대
 - 다양한 근로·근무형태 개발
-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및 단계적 적용
-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환경 조성

고령사회 대책

보건·복지부문



고령사회 대책

보건·복지부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정책
목표

풍요로운 노후생활 보장

정책
과제

문제점

- 고령자의 열악한 생활수준
 - 노인 85.3%의 1인당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
 - 노인의 28%가 빈곤선 이하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비효율적 운영
 - 노인의 26.4%(2005년)만이 공적 소득보장 수혜
 - 국민연금제도에 보험료 납부 예외자 상존
-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 미흡

대책

-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 급여개선 및 제도간 급여 연계 개발
- 공·사적 연금 연계체계 구축
 - 국민연금·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간 연계체계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 국민기초생활제도, 경로연금 제도 개선

고령사회 대책

보건·복지부문

노후건강보장체계 구축

정책
목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정책
과제

문제점

- 질병치료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운영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 중·고령자 대상의 건강증진사업 미흡
- 고령자의 일차보건의료사업 미흡
 - 가정방문보건의료서비스 미흡
 - 만성질환관리, 투약관리서비스 부재
-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미실시

대책

-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예방·치료·요양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
 -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 치매·중풍 등 중증 기능장애노인 중심: 2007년 수발보험 도입

고령사회 대책

보건·복지부문

주거·사회참여활동 보장

정책
목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정책
과제

문제점

- 성인계층의 평생학습참여 저조
- 평생학습 참여율: 17.2%
(OECD평균 35.6%)
- 노인가구 특성에 부합한 주택건설 미흡
- 노인거주 주택의 편의시설 부족
- 중·고령자계층의 여가·문화활동 지원 부족

대책

- 퇴직준비·생애생활설계교육프로그램(PREP) 실시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의 개선
- 노인주택모델 개발, 주거환경의 장애 제거
- 청소년·고령자 통합 여가 및 자원 봉사활동 프로그램개발

고령사회 대책

재정·금융부문



고령사회 대책

재정·금융부문

재정수지의 균형 유지

정책
목표

균형적 재정수지 달성

정책
과제

문제점

-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한 재정수지의 불균형 전망
 - 저출산에 의한 재정수입 감소,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 세입기반의 약화
 - 경제성장률의 둔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에 따른 세입기반 위축

대책

- 재정수입증대를 위한 세제·세정 개선
 - 세금누수 포착 및 징수율 증대
- 공공재정지출의 효율화
 -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비효율적 지역개발 및 재정지출 통제
 - 사회보장제도의 선별적 국고 지원대책 강구

고령사회 대책

재정·금융부문

금융자본시장의 효율화

정책
목표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

정책
과제

문제점

-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률 제고 미흡
 - 국민연금자산운용('02년):
주식 8.2%, 채권 90.9% 투자
- 노후대비 장기금융상품 개발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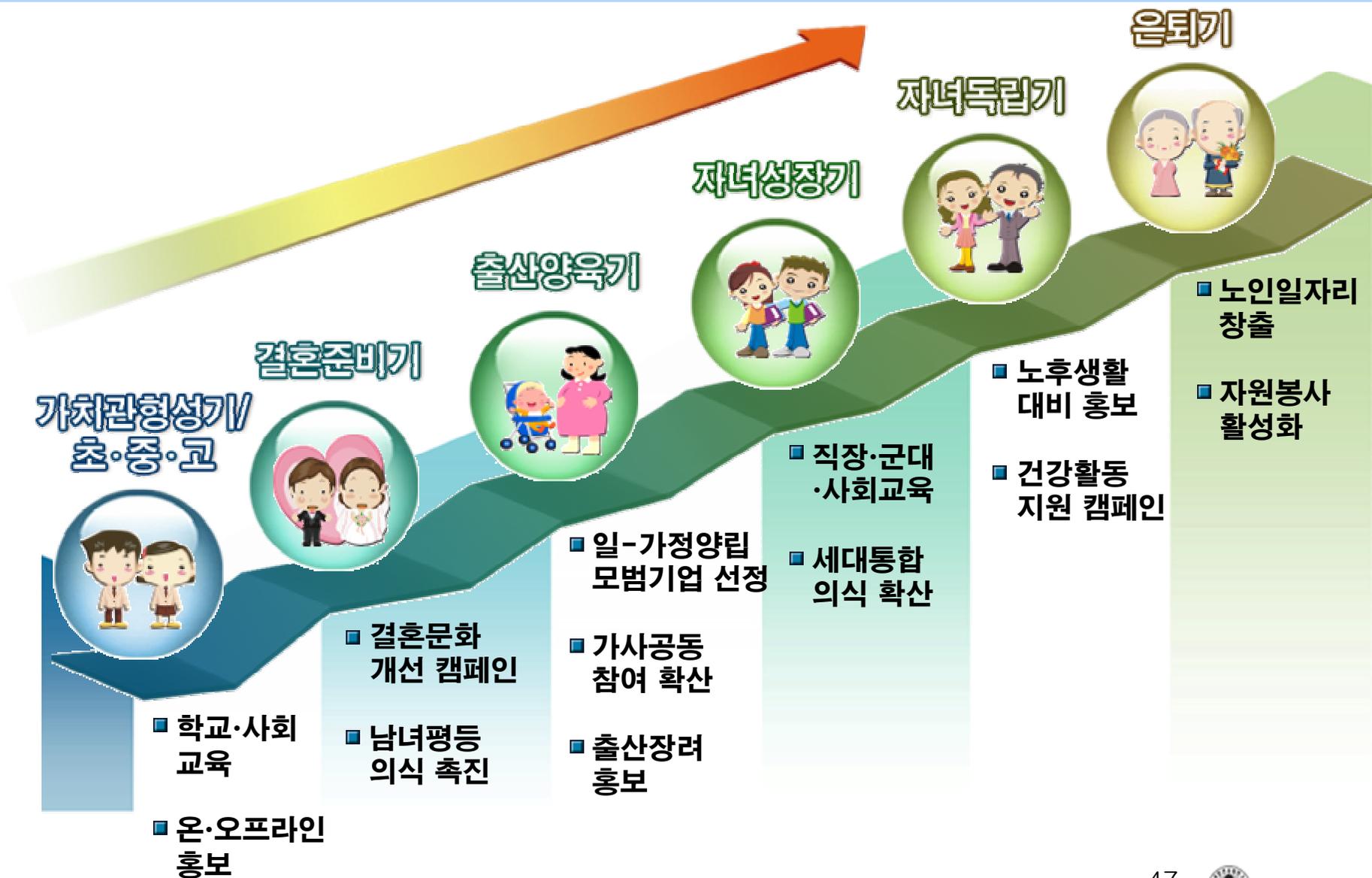
대책

- 국민연금기금의 장단기 균형적 투자 유지
- 장기금융인프라 개선
 -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개발
 - 장기금융상품의 개발 보급 [역모기지 상품 등]

IV.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전략

- **생애주기별 전략적 교육·홍보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 범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투자계획**

생애주기별 전략적 교육·홍보 추진



저출산·고령사회 범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종합대책 수립·시행
- 사회적 합의 추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 2006~2010년 5년간 총 투자규모는 32조 746억원
 - 국비 11조 2,563억원(35.1%), 지방비 12조 9,805억원(40.5%), 기금 등 7조 8,378억원(24.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안)

(단위: 억원)

	'06	'07	'08	'09	'10	계
계	37,500	56,979	71,033	72,969	82,265	320,746
국비	12,622	18,859	24,646	26,012	30,424	112,563
지방비	14,311	23,009	29,797	29,553	33,135	129,805
기금 등	10,567	15,111	16,590	17,404	18,706	78,37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투자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 출산·양육 지원 18조 8,998억원, 노후생활기반 조성 7조 1,802억원, 성장동력 확충 9,600억원, 기타 34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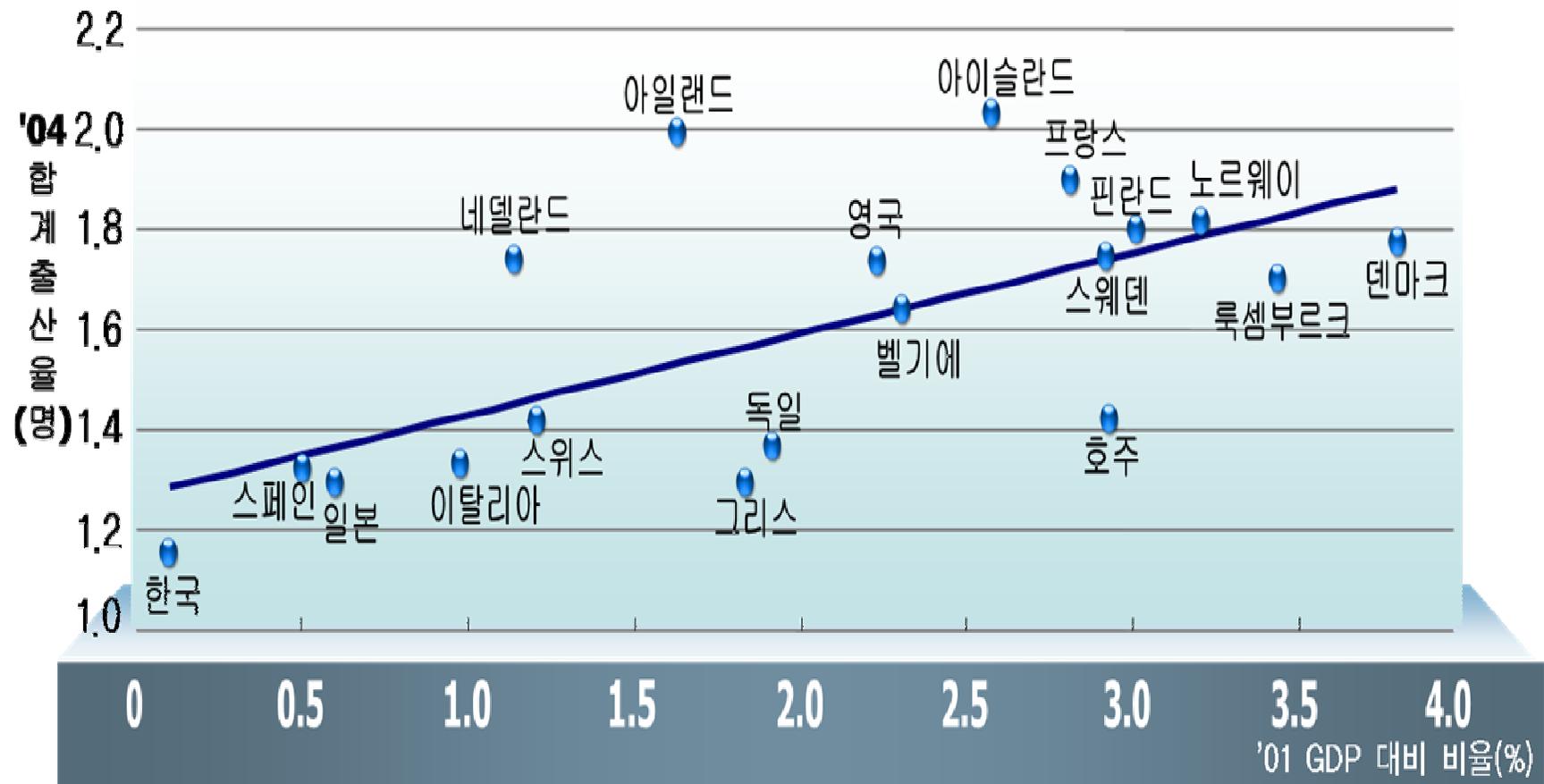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분야별 투자계획(안)

(단위: 억원)

	'06	'07	'08	'09	'10	계
계	37,500	56,979	71,033	72,969	82,265	320,746
저출산	21,133	32,489	40,265	45,569	49,542	188,998
고령화	8,367	12,809	18,040	14,075	18,511	71,802
성장동력	7,987	11,614	12,644	13,236	14,119	59,600
기타	13	66	84	89	94	34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투자계획

→ GDP대비 출산양육관련 예산비율(OECD)



감사합니다.